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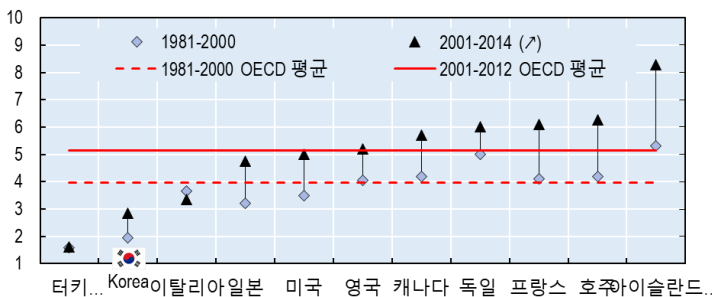
## 한국의 상황은?

엠바고 2019년 3월 27일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는 OECD 국가의 사회적 웰빙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특별 챕터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하 약자 LGBT) 규모, 그들의 경제적 상황 및 웰빙의 정도, LGBT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다루었다. 국민들의 사회 및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2018년 OECD 중요한 위협에 대한 설문조사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본 간행물은 일반,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등 5개 영역의 25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트: 동성애 수용도는 1-10의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음, 10은 언제나 정당함을 의미  
 출처: [Figure 1.6]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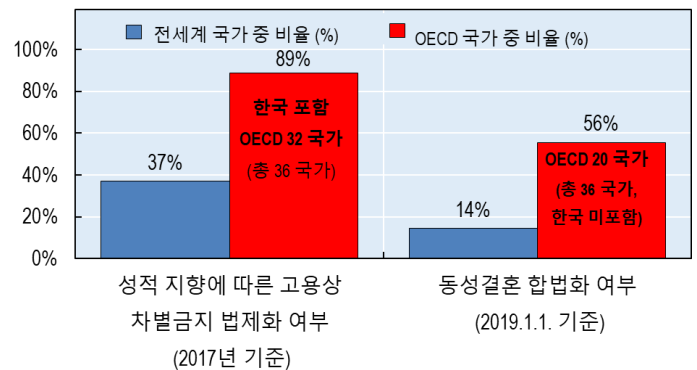
### 성소수자(LGBT) 집중 조명

한국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설문 포함된 국가적으로 대표성 있는 조사 및 성인인구 중 트랜스젠더의 비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관련 통계를 추정할 수 있는 OECD 14개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LGB)는 성인인구의 2.7%인 상당한 수준이고, 지속 증가하고 있다 [Figure 1.4]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젊은 코호트의 증가하는 커밍 아웃 경향성을 감안할 때 LGB 성 정체성에 대한 공개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LGBT 집단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보다 OECD 국가에서 그 개선의 정도가 일관되고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 한국은 동성애 수용도가 10점 만점에 3점으로 OECD 평균 (2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1].

LGBT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는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림 2. 성 소수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Figure 1.18]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LGBT 집단은 고용상 지위 및 임금 소득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Figure 1.12], 관련 실험은 LGBT에 대한 차별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 지원자의 성적 지향이 게이 및 레즈비언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및 근무경력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 동일한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면접에 초청될 확률이 1.5배 정도 낮다 [Figure 1.13].

국가는 정책을 통해 LGBT에 대한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 통계에 있어 LGBT 개인 및 그들이 직면한 불이익을 가시화하는 것은 포용성 증진의 전제 조건이고, 한국은 이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LGBT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LGBT 개개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국은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OECD 32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림 2]. 미국의 동성결혼 정책이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정의하는 청소년의 자살 시도를 15% 가량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적 편견에 대응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LGBT 포용성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다.

## 사회지표 개요

### 낮은 제도에 대한 신뢰

대한민국 국민 중 30%만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Figures 8.4].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OECD 평균 (43%) 보다 낮고, OECD 에서 8 번째로 낮은 순위이다. 스위스 (81%), 룩셈부르크 (71%), 노르웨이 (69%)의 정부 신뢰도는 한국에 비해 두배 정도이다. 대부분 OECD 국가와 달리 한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 수준과 관련이 없다.

사법제도, 군인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 낮다: 국민의 26%가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OECD 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 47%가 군인을 (OECD 에서 가장 낮은 수준); 64%가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 (OECD 에서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 다만, 한국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57%)는 OECD 평균 (46%)을 웃도는 수준이다.

### 부패 인식

한국인 다섯 중 네 명 (79%)는 한국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믿고 있다 [Figure 8.6]. 이는 OECD 평균 (4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의 경우 다섯 중 한 명만이 정부 부패를 언급했고, 일본의 부패 인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 투표율 감소

한국인의 2016 년 투표율 (61%)은 OECD 평균 (6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Figure 8.10]. 한국인 다섯 중 하나 (21%)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는 OECD 평균 (1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Figure 8.11].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투표율은 지난 25 년간 감소하였다 (1992 년 투표율은 75%).

### 여성에 대한 폭력

한국 여성의 다섯 중 한 명 (18%)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같은 질문에 대한 OECD 평균은 열 셋 중 한 명이다 [Figure 8.8]. 한국은 이 지표에 대해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여성의 약 17%는 평생 동안 친밀한 연인 및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Figure 8.7], 한국여성의 36%는 밤에 도시 및 거주지를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Figure 8.9].

### 높은 남성 흡연율과 낮은 여성 흡연율

2016 년 기준, 한국 남성의 33%가 매일 흡연을 하고,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OECD 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Figure 7.13]. 반면, 한국의 여성흡연율은 4%로 OECD 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흡연율은 남성 23% 및 여성 14%이며, 한국 흡연율의 성별 격차는 OECD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이 한국의 흡연율은 지난 10 년간 상당히 감소하였다.

### 여전히 높지만 감소하고 있는 자살률

자살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2016 년 인구 10 만명당 26 건의 자살이 있었고 이는 OECD 평균인 10 만명당 12 건의 두배 수준이다. 한국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Figure 7.10].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세배 정도 자살할 확률이 높다. 199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자살률은 2011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Figure 7.11].

### 가족 구성의 지연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1990 년대 초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25 세 및 남성 27 세였다. 2016 년에는 여성 30 세 및 남성 33 세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Figure 4.11].

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혼인율은 여전히 높다. 2016 년에 혼인율은 인구 1000 명당 5.5 이었고, OECD 평균은 인구 1000 명당 4.8 이었다 [Figure 4.12]. 1990 년대에 한국의 혼인율은 인구 1000 명당 9.3 이었으며, OECD 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이혼율은 OECD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혼율은 1990 년에 인구 1000 명당 1.1 에서 2016 년에 2.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2016 년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인구 1000 명당 1.9)보다 높다 [Figure 4.11] [Figure 4.12].

### 연락처:

OECD 사회정책과, 고용노동사회국

Marie-Anne Valfort +33 (0)1 45 24 98 65

[Marie-Anne.Valfort@oecd.org](mailto:Marie-Anne.Valfort@oecd.org)